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1
----------	-----

발의연월일 : 2024. 4. 4.

발 의 자 : 손정자, 김영실, 이상기,
김상수, 정현미, 박윤옥,
조성대, 이경숙, 한근수,
이진환, 이정애, 이수련

1. 제안 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업무 신설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및 자살예방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로 일괄 정비
- 자살예방지원계획 → 자살예방시행계획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제1호)
- 자살고위험군 →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안 제6조제2항제2호)
-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 (안 제10조)

나. 조항 신설

- 정의 (안 제3조)
-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3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제8호~제9호)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 회복 지원

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위탁 근거 항목 추가
(안 제9조제2항~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를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자살예방지

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고취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살예방센터”를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생명존중문화 및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한다.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9.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 회복 지원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명존중문화정책에 관한 자문”을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등의 이유”를 “등으”로,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 시도자”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으로, “가족 등에게”를 “유족 등에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자살 예방”을 “자살예방”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 (생략)	제4조 · 제5조 (현행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신설>

<신설>

8.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자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

② 시행계획-----
-----.

1. 자살예방시행계획-----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고취를 -----
4.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5. ~ 7. (현행과 같음)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9.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 회복 지원

1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제8조(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① -----

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의 추진

3.·4. (생 략)

③·④ (생 략)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
책에 관한 심의·자문-----

② -----
-----.

1. 시행계획-----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등으-----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

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삭 제>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업무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생략)

② 시, 단체 및 관련기관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

제11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살예방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 유족 등에게 ----

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
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
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
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
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정비 등의 조례안 개정 사항(조항 이동)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 없음

-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

- 제8조(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제8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안 제6조 7항에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기포함된 조문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 제11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현행조례안 제9조 3항에 기포함된 조문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항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조례안 제11조 1항에 기포함된 조문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정비 등의 비용 발생 관련 없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개정 의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